

한일 관계 이대로는 안된다

< > 전문가 4인의 제언

한일 양국관계 전문가들은 악화된 양국 관계가 더이상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지금 같은 상황은 양국 모두에 타격적인 만큼 조속히 정상화의 길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본보의 '한일 관계를 이대로 두려는 안 된다'는 시리즈가 시작된 뒤 양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낸 것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다만 꼬인 실타래를 푸는 단서를 찾는

일은 쉽지 않다.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해법은 뭘까. 신각수 전 주일대사, 도쿄 기즈히코(東郷和彦·교토산업대 세계문제연구소장) 전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 도쿄대 방문연구원으로 일본에 체재 중인 이원택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 기미야 다다시(木高正史) 도쿄대 현대한국학연구소장 등 전문가 4명의 의견을 각각 듣고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역사-안보 분리 접근... 양국 정상회담이 만나 선순환 만들라”

-한일관계 현주소부터 진단하건

신각수 전 대사(이하 신):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정치적으로는 관계가 나빠도 비정치적 분야에서는 교류가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경제 문화 이력 교류마저 축소되고 있다. 이는 양국 관계의 기반을 갱신하는 것이다.

기미야 교수(이하 기미야): 일본인 중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역사 인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꽤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일본을 자주 비판하거나 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직접 얘기해야 한다. 그래야 일본 국민도 '아베 정부도 뭘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도고 전 국장(이하 도고): 양국의 역사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감정적으로 대립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뤘고 지금은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발전 후 20년간 경기침체로 고생했지만 최근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서로 좀 더 자신과 여유를 갖고 상대를 보면 싸움 이유가 없다. 하지만 최근 상대 국민에 대한 호감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이다. 어딘가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양국 정치가와 오피니언 리더도 발언에 유의해야 한다.

-어떤 접근법이 필요할까

이원택 교수(이하 이): 한국 정부가 강제 징용자 문제에 대해 방향을 잘 잡는 게 현재 단계에서 중요하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타결됐다고 해놓고는 국내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이를 뒤집으면 국제 신인도에 문제가 생긴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견해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위안부 문제 해결에 힘이 생긴다.

그렇다고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따르되 정부가 징용자 문제를 국내 조치로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확실하게 공표해야 한다. 그러면 어려운 공이 일본으로 넘어간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징용자 보상 문제도 도의적 책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도고: 한일 간에는 여러 현안이 있는데 각각의 현안이 다른 현안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은 이 현안들을 분리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필요하다. 하나의 현안이 조금이라도 전진하면 다른 사안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악순환을 어디서든 선순환으로 바꿔야 한다.

신: 일본이 문제를 만들고 있지만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우리가 너무 과거에만 집착해 한일 관계가 악화된다는 시각도 있다. 사실과 파피르 인식으로, 우리 외교 환경에 별로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일 관계가 나

쁠 때일수록 관리가 필요하다. 만나지 않는 것보다 만나서 우리 요구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환경 조성 작업을 양측이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요구하는 것과 일본의 생각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매우는 작업도 본격화할 수 있다.

기미야: 정상회담을 하면 오히려 아베 총리의 앞으로의 말이 행동에도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한국 정부는 역사 문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분리해 대화할 필요가 있다. 외교-안보 정책은 한국과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일본의 문제다. 역사 문제에서 아베 정부의 양보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분리 대응이 필요하다.

도고: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다. 일본은 박 대통령의 어려운 국내 정치적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일본과 타협할 수 있는 입지가 오히려 많다. 아베 총리가 먼저 움직여야 하는 이유다. 위안부 문제는 복잡한 경우가 있지만 피해 할머니들이 살아 있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서로가 조금씩만 양보하면 된다.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문제는 한일간의 기본에 상충을 안 주는 형태로 양국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방법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 강제 징용자 소송 문제는 이대로 방치하면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일본은 오히려 이런 기회에 지랄질, 도의적으로 기금을 만들어 희생자에게 속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상회담 결과가 나를 우려 있는데-

이: 정상회담을 통해 세 가지 일을 하면 된다. 첫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문제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징용자 보상 문제는 한국이 책임 지고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책임진다는 식으로 현안 해결의 가닥을 잡는 것이다. 셋째, 미래 협력에 합의하고 분야별 협력 항목을 정하는 것이다.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뉘엿수를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지만 그건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일본의 문제다. 외교적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불명예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기미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높지만 일본 국민이 모두 역사인식 때문에 지지하는 게 아니다. 아베 내각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나머지 문제에 대해 후회적으로 대화하면 아베 총리를 둘러싼 역사 근본주의 세력도 약해질 것이다.

도고: 40년간 국제정치를 해 온 느낌으로 말하자면 한일 간에 어느 한 부분에서 선순환이 가능되기 시작하면 1년 이내에 적어도 원래 관계로 돌아갈 것으로 믿는다. 서로 냉정하게 역사의 큰 흐름을 생각하며 지금 분위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도쿄=베국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신각수 전 주일대사
韓, 너무 과거사 집착 말고
공식-비공식 채널 가동
만나서 요구사항 전달
상호간 간극 메워가야



도고 전 日 조약국장
서로 자신감을 가지면
상대와 싸움 이유 없어
위안부 문제 해결 위해
아베가 먼저 움직여야



이원택 일본학연구소장
징용자 보상은 한국이
위안부는 일본이 책임
분야별 협력 항목 정해
외교적 약속이행 나서야



기미야 한국학연구소장
朴대통령이 대화 나서면
아베도 말-행동 제약받아
日 역사 근본주의 세력도
점점 약해질 가능성

www.ipark-avenue2.co.kr

모텔하우스
오픈중

伊총리, 리비아 영웅 아들에 절까지 하며 사죄

전문가 “과거거정산, 伊에 배워라”
식민지배 때 가져간 비너스상 반환
군사협력 조약 맺고 50억달러 배상

일본 일본인은 주변국자들의 과거사 청산 요구에 대해 “언제까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둘까”는 식의 적반하장 반응마저 보인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리비아 식민지사 청산 사례를 보면 일본이 아직도 부족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다수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리비아는 1911~1943년 이탈리아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다. 일본의 한반도 강점시기(1910~1945년)와 거의 비슷하다. 무솔리니 이탈리아 군대가 연합군에 패퇴하면서 식민지배가 끝났다는 점도 유사하다. 이후 리비아는 왕정과 군사 쿠데타로 서반과 관계가 단절됐다. 해방 65년째 되던 해(2008년)에 과거사 청산 기회를 맞았다. 그해 8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당시 이탈리아 총리는 “리비아-이탈리아 우호협력 조약에 서명하면서 ‘이탈리아는 식민지간 중 리비아 국민들을 상대로 한 약탈, 살인, 파괴 행위에 대해 사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탈리아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 수반으로서 사죄한

다”고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탈리아 식민지배에 저항한 리비아의 영웅 오마르 무크타르의 아들에게는 서명식에 초대해 절을 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베를루스코니는 법적인 사과와 함께 정서적인 감정 유지까지 한 셈이다.

당시 특히 주목받은 것은 서명식에 맞춰 이탈리아 총리가 리비아 벵기지에 가져온 물건이었다. 그는 식민지 기간에 이탈리아로 강제로 가져갔던 비너스상(의Venus of Cyrene)을 이날 리비아에 돌려주었다. 비록 전년도에 이탈리아 행정위원회 리비아에 반환하라고 판시하긴 했지만 총리가 직접 이를 실행함으로써 판결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정치적 무게감을 담았다. 지금도 한반도 분화제의 반출 시기와 약탈 여부를 놓고 벌리는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과 완전히 다른 태도다.

이런 진정성을 바탕으로 리비아-이탈리아는 합동훈련을 비롯한 군사분야 협력까지 양국 조약 23조에 명시했다. 한일 간에는 영토도 내지 못할 일이다. 이날 이탈리아는 리비아에 50억 달러(약5조3000억 원)를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비록 조약에서 ‘손해배상(repairation)’으로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공식 사죄가 있었던 만큼 돈의 성격은 명확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다.

최승호 기자 shcho@donga.com

위례 트랜짓몰 첫 자리에서 누리는 강남 테라스 프리미엄

1차 아이파크 상가 분양성공으로 검증된 2차 상가분양
위례 아이파크 예비뉴의 100%분양으로 검증된 위례의 핵심상권 트랜짓몰,
그 첫 자리를 선점한 위례2차 아이파크 예비뉴에서 성공의 기회를 잡으십시오.

테라스에서 만나다
위례2차 IPARK AVENUE

상가 성공투자의 모든 것을 담다!

신도시 핵심상권의 첫 자리를 차지하다

수변공원, 트램 역세권으로 고객을 모이다

테라스형 상가로 트렌드를 리드하다

아이파크 예비뉴는 신도시 핵심상권인 트랜짓몰 첫 자리에 위치, 위례신도시 102만여 고층수요의 고객을 확보한 자리
아이파크 예비뉴는 트램 위례 내부상가 수변공원이 인접하고 고객확보가 쉽지는 않은 환경에 위치
아이파크 예비뉴는 트랜짓몰 리드하는 테라스형 스트리트 상가로 2.4~3m 테라스 및 특활용 공간 제공이 특이한 장점

분양문의

1644-0064

아이파크 예비뉴는 분양권 매매를 통한 분양권 취득이 가능하며, 분양권 매매 시 계약금 10% 이상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단, 분양권 매매 시 계약금 10% 이상을 납입하셔야 합니다.)